

정부 '벤처 재도약 방안'에 무얼 담았나

지난 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'벤처기업 재도약 방안'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. △벤처창업 △벤처캐피탈 △기술혁신 △시장창출 △수출지원 5개 부문의 재도약 방안을 관통하는 원칙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이다.

정부도 이 재도약 방안이 지난 2월 벤처확인 요건강화와 간접지원 전환을 골자로 한 '벤처 건전화 방안'의 연장선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.

재도약 방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현재 극도로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부문의 각종 제도 도입으로 보인다.

이번 방안에서 빠진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은 금융감독 위원회가 별도로 내놓기로 했으며 벤처기업 인수합병(M&A) 활성화 방안은 내년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.

벤처캐피탈 투자여력 확충

벤처캐피탈의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투자사가 보유한 주식이나 전환사채(CB), 신주인수권부사채(BW)를 매입하는 '프리코스닥 유동화 펀드'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. 이 펀드를 통해 벤처캐피탈이 보유한 구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벤처캐피탈협회에 벤처캐피탈 구조투자정보망을 개설해 창투자 보유주식 거래를 위한 호가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, 이를 프리코스닥 유동화 펀드와 연동시켜 벤처캐피탈 투자주식 유통 전용시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.

또 정부가 정책자금을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을 지양하는 대신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모태펀드를 설립해 정부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.

우선 시범사업으로 내년 중 5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설치하고 기관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출자금은 후순위배당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.

벤처담당 기관인 중기청은 이런 출자방식이 정책자금을 창투조합에 직접 투자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이고 재정출자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벤처창업 촉진

창업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. 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시험검사장비 및 공동 AS망 설치와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.

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입주 공간 제공을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유휴 공공시설을 포스트-BI로 활용하는 한편, 해당지역 소재 벤처촉진지구와 테크노파크 입주 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.

벤처기술혁신 인프라 구축

18개 부처와 투자기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올해 13%에서 2005년에는 20%로 확대하기로 했다.

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벤처기업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확인요건에 106개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, 이 사업의 일정액을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우선 지원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.

또 산학협동체계를 강화해 대학 내 산학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을 별도법인으로 설치하고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'학교기업'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.

벤처 신시장 창출 및 구매확대

내년 국방물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04~2007년에는 200개 조달품목에 1조 1500억원 규모로 늘려나가기로 했다. 방식은 기술개발대상 품목을 발굴해 5년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이다.

한편, 2004년부터는 대상기관을 조달청·수자원공사 등 정부 출자기관과 공공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 중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.

해외시장 개척강화

벤처 수출제품의 현지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지역을 대상으로 보스턴에 수출부품 물류창고 및 AS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 설치해 운영하고, 인도 뉴델리에 벤처 수출품의 불편신고 접수와 구매상담을 맡을 벤처공동 콜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.

또 해외진출 벤처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스타펀드를 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무역을 전담해 대행하는 수출대행전문회사(EMCs)를 올해안에 10개 내외로 지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.